

민주 시도당 위원장 공천 입김 차단…잡음 원천 봉쇄

광역·기초 비례대표 의원 순번, 권리당원 투표 100%로 변경
공관위 구성 과정 ‘자기 사람 심기’ 부작용 우려…후속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8일 발표한 6·3 지방선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은 ‘특정인(시도당 위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견제해 지방의원 공천과 관련한 어떠한 잡음도 막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공정한 경선을 위해 시·도당 의사결정 기구인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선출하던 광역·기초 비례대표 의원 순번을 관리당원 투표 100%로 변경한데 이어 이날 공천 관련 기구 구성 과정에도 시·도당 위원장을 배제하는 강수를 내놓았다.

이는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의 공천 과정에 시·도당 위원장의 지나친 개입을 막고, 컷오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규정을 담으면서 최근 불거진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현금 의혹’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중앙당의 이러한 지침에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과정에 시·도당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과정에 시·도당 위원장이나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들이 추천한다면, 공천 과정에서 우회적으로 입김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관리 기구 참여를 금지하고, 지역위원장은 필수적 인원을 제외하고 공천관리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을 발표했다.

또 이해관계자는 표결에 배제되고 컷오프(공천 배제)의 경우에는 명확히 사유를 기재해 억울한 탈락자를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도당 위원장은 앞서 광역·기초 비례대표 의원 선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지방선거

공천 전 과정에서도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도당 위원장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는 특단의 조치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천 전 과정을 총괄하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각 시·도당이 구성하기 때문에 위원장의 힘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에도 시·도당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겸하거나 측근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공관위에 관여했기 때문에 공천 관련 기구 참여 배제가 시·도당 위원장의 손발을 묶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에도 일부 시·도당 위원장이 물밑에서 공천에 개입해 잦은 말썽을 빚기도 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시·도당 위원장이 자신의 사람들로 공관위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 뒤 공천 작업을 주도하는 일종의 ‘수렴정장’이 문제”라면서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배제 시도는 공관위 구성 과정에 ‘자기 사람 심기’ 부작용만 낳을 수도 있어 중앙당에서 공관위 구성 전반에 대해 현미경 감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공천 현금 논란에서 벗어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추가 대책 마련도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공천관리기구의 운용과 관련해서 회의가 진행되면 반드시 공개 브리핑을 통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며 “공천 관련 자료, 제보와 투서 등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지 규정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 및 무소속 소속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의원들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형배, 호남 K-반도체 거점 육성 해법 모색

12일 광주과기원에서 포럼…미래 먹거리 선점 ‘액션 플랜’ 설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룡관 다목적홀에서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광주·전남통합반도체포럼준비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정부의 2047년 ‘반도체 세계 2강 도약’ 비전에 발맞춰, 지역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짜는 데 주력한다.

이번 포럼의 핵심 화두는 ‘에너지’와 ‘특화 전략’이다.

전남지역이 보유한 풍부한 재생에너지(RE

100)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워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정부 주도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예정이다.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된 국내 산업 구조를 보완할 시스템반도체와 후공정 분야에서 광주·전남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민형배 의원은 “포럼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제언을 토대로 입법 활동과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내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

12·3 계엄 때 핵심적 역할 수행

안보수사·보안감사 기능 등 이관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된다.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관되며, 인사 첩보 및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된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자문위의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첩사는 광범위한 권한을 토대로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2·3 비상계엄 때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6월 대선 때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제시했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 이관할 것을 같은 해 8월 권고한 바 있다.

작년 9월 말 출범한 자문위는 수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날 구체적인 방첩사 해체 방안을 발표했다.

홍현익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장은 언론브리핑에서 “안보수사 기능은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與 “12일부터 1월 임시국회”

2차 특검법·민생법 처리 방침

이혜훈 인사청문회 19~20일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8일 2차 종합특검 법안과 민생 입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2차 특검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마저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께 사과는 하겠지만 내란 청산을 위한 2차 특검은 안 되고, 민생은 행기겠지만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는 모순의 극치고 명백한 국민 우롱이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민생

입법 처리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 산적인 민생 법안들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12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늘 중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12일부터 1월 임시회가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서 “19~20일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청문회 실시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당원 자격정지 1년’ 강진원 군수 재심 청구

“민주 당원관리 시스템 제도 취약…단체장에 가혹한 처분”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올해 지방선거 출마 자격이 제한되는 중징계를 받은 강진원 강진군수가 당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소명에 나섰다.

8일 강진원 군수측에 따르면 강 군수는 9일 ‘당원 자격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에 대한 재심을 중앙당에 요청할 예정이다.

강 군수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모든 개인·지자체들의 당원 가입 행위를 사전에 인지·통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불법 당원 모집을 지시하거나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당이 한계가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체장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개인이 아닌 정당 당원관리 시스템의 제도적 취약성에 있다”면서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 신청(접수)이 가능했던 구조, 실명·본인확인 절차

가 미비했던 제도 자체가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이 미비한 제도 자체를 보완하지 않고, 극소수 사례를 들어 선거를 앞둔 단체장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징계를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강 군수에게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으며,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1년간 당원으로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강 군수 외에도 구북규 화순군수, 전남 서남권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 광역의원 입지자 등 총 4명에게 혐의가 인정돼 당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중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처분을 받은 구북규 화순군수의 경우, 징계에 불복해 당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

한 사람의 보험비지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의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T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